

# 현안<sup>과</sup> 과제

■ 2014년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 점검  
-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에 달려있다



 **현대경제연구원**

## Executive Summary

### □ 2014년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 점검 -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에 달려 있다.

#### ■ 미국 경제 동향

최근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전분기대비 연율 1.1%와 2.5%로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 미국 경제 회복 점검

미국 경제의 회복 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고용 개선이 다소 지연되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첫째**,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실업률 하락과 가계 디레버리징 완료로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내구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더 빠른 증가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 고용과 순자산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주택 판매량은 증가하며 재고량은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이다. 그림자재고도 안정적인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의한 건설업 투자 증가가 건설업 부문의 고용 창출 및 순자산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둘째**, 투자 부문을 보면 기업의 재무여건은 개선되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향후 투자 확대 여건은 마련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고용 창출을 가져와 소비 개선에 기여하여 경제 회복을 이끈다. 다만, 현재 설비투자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은 배경에는 아직은 소비 개선세가 투자 증가를 이끌만큼 미래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증가한 수출은 이후에 감소세로 전환되어 재화 부문의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넷째**, 건축재정 시행으로 2013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6,8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경기침체에 공공부문 지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면, 현재 경기회복기에서는 재정의 경기 견인력은 약화되고 있다.

#### ■ 종합판단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여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직전의 단계이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 부문의 고용 창출력은 다소 약하다.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은 고용 개선에 달려 있다. 2014년 미국 경제 회복 속도는 현재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계 및 기업의 재무여건 개선이 주택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개선 추세가 건설부문과 제조업의 투자 및 고용 증가, 소득 증가와 소비 수요 증가 등의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고용 선순환 고리' 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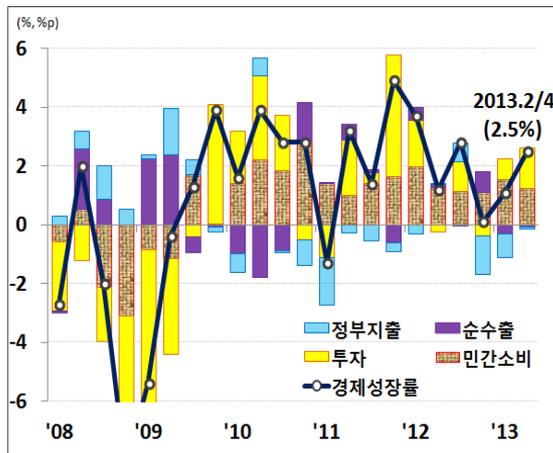
#### ■ 시사점

미국 경기 회복세 변동에 따르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경기 회복세가 예상만큼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미 수출 증대 기회 요인과 미국의 해외자본 유치 정책을 활용하고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응하여 국내 투자의 선제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출구전략 시행에 대응하여 해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감시와 이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내수 침체를 완화해야 한다.

## 1. 미국 경제, 완만한 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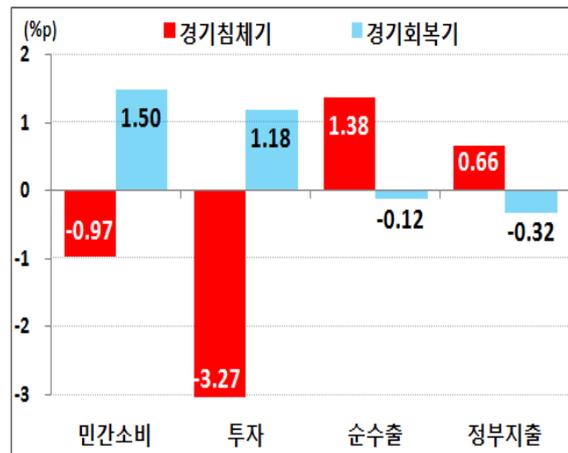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
  - 2013년 들어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가시화되는 모습
    -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분기대비 연율 1.1%와 2.5%로서 상승세
    - 향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13년 1월 94.1p에서 8월 현재 96.6p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기대감 형성
  - 한편, 미국 연준(Fed)은 미국 경제 회복의 징후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양적완화 축소를 연기
    - 연준의 경기 동향 판단에 따르면 고용 시장의 개선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
    - 또한 재정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은 전체 국민총생산 중 내수의 비중이 큰 경제 구조로서 내수경기 활성화가 경제 회복으로 직결됨
  - 국내총생산 중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경기회복기<sup>1)</sup>에는 민간소비의 개선 정도에 따라 경기 회복이 좌우됨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추이 >



자료 : 미국 상무부.  
 주 : 1) 경제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연율).  
 2)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8.3%).

< 경기 사이클별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미국 상무부, 전미경제연구소(NBER).  
 주 : 1) 경기침체기(2007년 4/4분기 ~ 2009년 2/4분기).  
 2) 경기회복기(2009년 3/4분기 ~ 현재).

1)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미국의 경기변동을 침체기와 확장기로 구분하여 공표함. 최근의 침체기는 2007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이며 확장기는 2009년 3/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까지임.

- 2012년 기준으로 미국 국민총생산 16억 2,446억 달러 중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
  - 투자와 순수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3%(수출 : 14%, 수입 17%), 19%
  - 경기회복기인 2009년 3/4분기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에 민간소비가 미치는 분기별 평균 기여도는 1.50%p로 투자(1.18%p)와 순수출(-0.12%p), 정부지출(0.32%p) 등에 비해 높음
  -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점은 경기회복기에 수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임
- 민간소비와 투자, 대외교역, 정부지출 부문의 경기 동향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회복 추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민간소비의 개선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시장 현황, 가계 채무상환 및 부채 수준, 순자산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분석
    - 소비의 절반 이상이 고용에 의한 임금에 기반함
    - 임금을 제외하고는 차입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짐. 특히 경제 위기시에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소비 변동성이 확대됨
    - 가계 자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실물자산 중 주택의 가격 상승은 가계의 순자산효과를 가져와 소비 여건 개선에 기여
  - 투자 부문에서는 건설업 투자 증가가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지의 여부와 기업 투자 확대에 기여하는 재무 여건 개선 현황 파악
    - 주택경기 활성화는 건설업 투자 증가와 고용 확대를 가져와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순자산효과로 이어지며, 결국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
    - 기업의 재무 여건을 확인하여 투자 확대가 미진한 이유가 부채 감축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지 파악
  - 대외교역 부문에서는 수출 증가세를 확인
    - 수출이 증가하면 제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결국 고용 확대로 연결됨
  - 정부지출은 경기회복기보다는 침체기에 고용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
    - 정부지출은 경기 회복기보다는 침체기에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이를 통한 경기 회복 견인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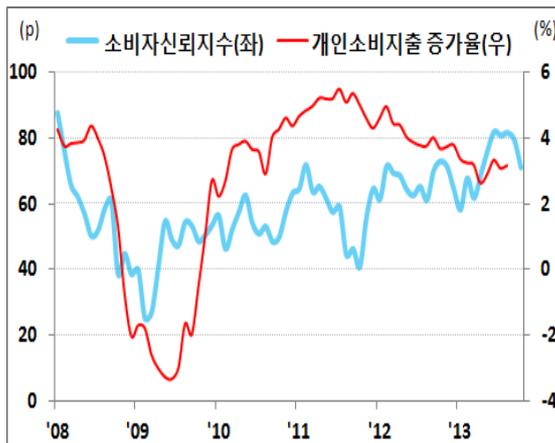
## 2. 미국 경제 회복 점검

### ① 민간 소비 : 완만한 증가세 유지

#### ○ (소비지출 증가) 개인소비지출 및 소매판매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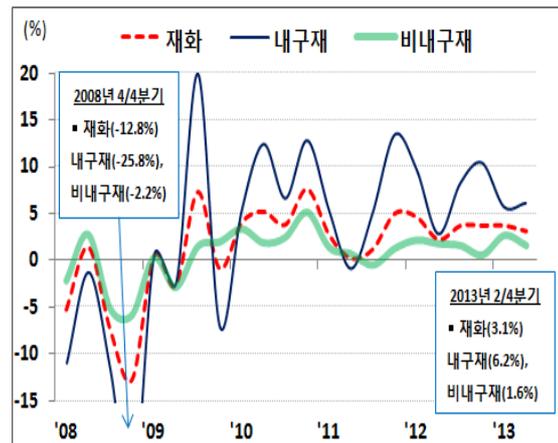
- 최근 연방정부 폐쇄 등 정치 리스크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지출은 증가세를 유지
  - 2013년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반년만에 최저치인 71.2p를 기록. 이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 확대에 기인
  - 개인소비지출은 4월과 5월의 2%대(전년동월대비)에서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2%의 증가율을 보여 소비지출 확대 유지
  
- 내구재를 중심으로 재화 부문의 소매판매는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 2012년 하반기 이후 재화 부문의 소매판매는 3%대의 증가율(전분기대비 연율)을 유지
  -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인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전분기대비 연율)은 2013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5.8% 및 6.2%로 반등

< 소비자신뢰 및 개인소비지출 추이 >



자료 : 컨퍼런스보드, 미국 상무부.  
 주 : 1) 계절조정자료.  
 2)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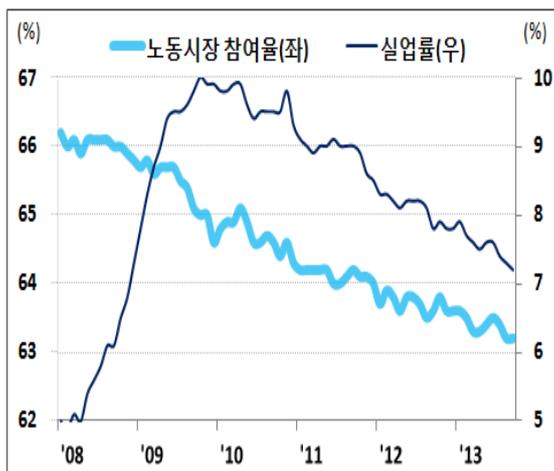
<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재화 부문별) >



자료 : 미국 상무부.  
 주 : 1) 계절조정자료.  
 2)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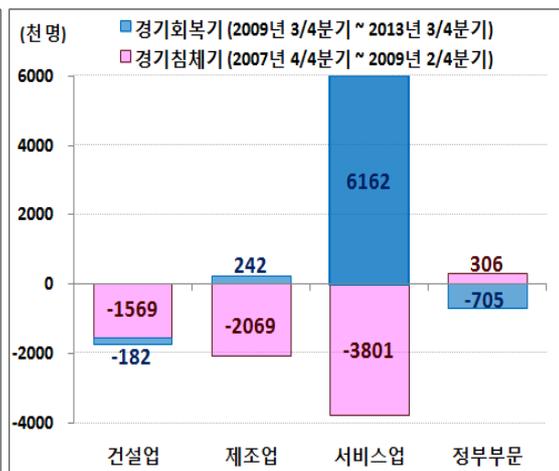
- (고용시장 질적 개선 미약) 고용시장에서는 질적 개선이 지연되는 반면, 양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진행중
  - 최근 실업률은 하락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작용
    - 2013년 9월 실업률은 7.2%로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7.3%) 이후 최저치
    - 노동가능 인구 대비 노동시장참여 인구의 비중을 보여주는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금융위기 직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 9월, 사상 최저치인 63.2%를 기록
  - 신규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어 소비 부진 우려
    -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수는 2013년 2월의 33만 2천 명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만 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 9월 현재 14만 8천 명을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부문에서 감원되었던 부분(-380.1만 명)은 2009년 3/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기에 만회하였음(616.2만 명)
    - 반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sup>2)</sup>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감원된 부분이 충원되지 않는 등 질적인 개선에 한계

< 실업률,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 >



자료 : 미국 노동부.  
주 : 계절조정자료.

< 금융위기 전후 업종별 신규취업자수 증감 >



자료 : 미국 노동부.  
주 : 1) 계절조정자료.  
2) 경기회복기 및 침체기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구분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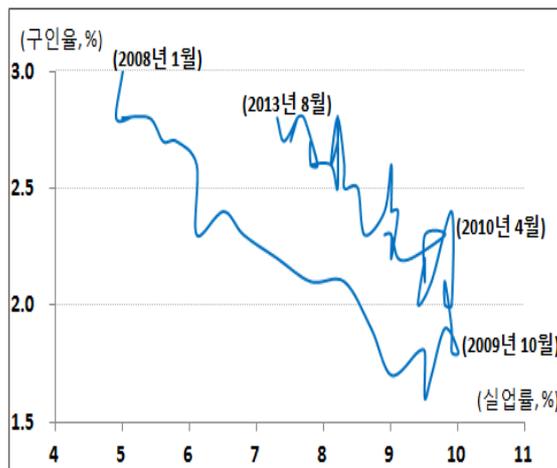
2) 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은 23.22 달러로서, 건축업의 25.75 달러와 제조업의 23.92 달러에 비해 낮음(자료 : 미국 노동부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 구인율과 실업률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커브<sup>3)</sup>는 좌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실업률 하락을 뒷받침함
  - 베버리지 커브가 좌상향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고용률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실업률 하락으로서 경기 팽창을 의미하지는 않음
  - 또한, 2009년 10월 이후 원점에서 멀어지는 이동 경로를 보여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

○ (가계 부채 부담 완화) 가계 재무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여력 확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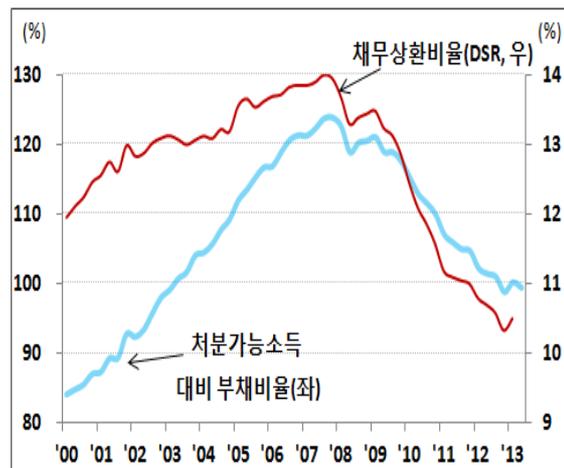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 감축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이후 가계의 부채상환 노력의 결과, 채무상환비율(DSR)은 2008년 1/4분기 13.7%에서 2013년 1/4분기 10.5%까지 하락. 다만,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르는 이자 지급 부담으로 DSR은 소폭 반등
  -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sup>4)</sup> 비율은 2008년 1/4분기 122.6%에서 2013년 2/4분기 99.3%까지 하락

< 베버리지 커브 >



자료 : 미국 노동부.  
주 : 계절조정자료.

< 가계 재무여건 추이 >



자료 : FRB.  
주 : 1) 계절조정자료.  
2) '가계'는 일반 가구 및 비영리단체.

3) 베버리지 커브는 인력수요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노동력과 일자리(job)간의 노동시장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임(용어 설명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국내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2009년 10월).  
4) 부채는 Mortgage Loan과 Consumer Credit의 합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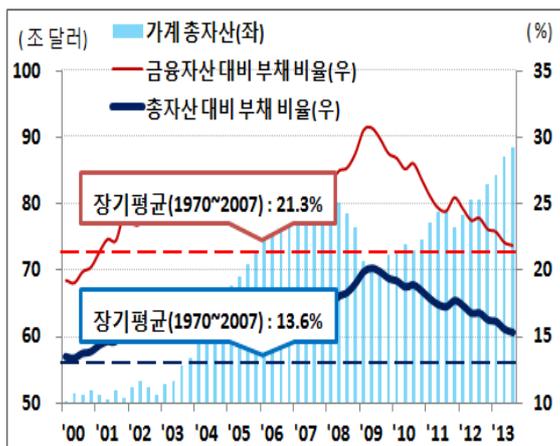
- 가계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여 순자산효과 확대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기대
  - 주가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 가계 부채 감축 노력 등의 요인으로 가계 총자산은 2012년 4/4분기 84.2조 달러에서 2013년 2/4분기 88.4조 달러로 증가
  -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3년 2/4분기 현재 15.3%로 장기평균치(1970~2007년)인 13.6%에 근접
  -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3년 2/4분기 현재 21.9%로 장기평균치(1970~2007년)인 21.3%에 근접

○ (부동산시장 개선세 지속)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르는 순자산효과<sup>5)</sup> 발생으로 소비 확대 기대

-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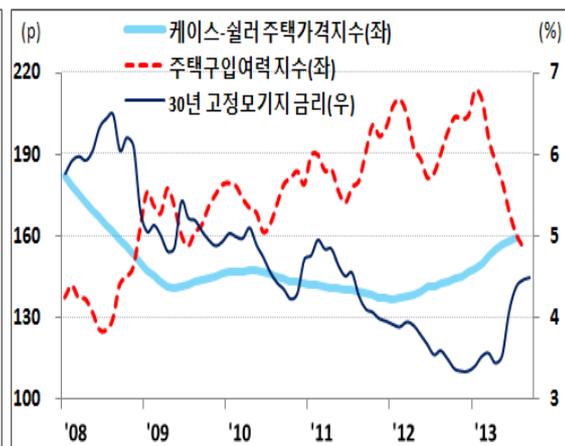
-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008년 8월 6.46%에서 2013년 9월 현재 4.49%까지 하락. 다만 최근 출구전략 시행 관련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상승
- 주택구입여력지수<sup>6)</sup>는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여 2013년 8월 현재 156.1p를 기록
- 2013년 8월 현재 케이스-윌러 주택가격 지수는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5월 140.85p 대비 14.3% 상승한 160.55p

< 가계 자산 및 부채비율 추이 >



자료 : FRB.  
 주 : 1) 계절조정자료.  
 2) '가계'는 일반 가구 및 비영리단체.

< 주택가격, 모기지금리, 주택구입여력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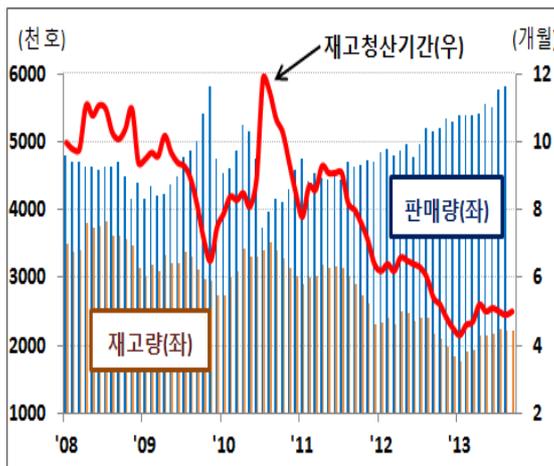


자료 : S&P, Freddie Mac, NAR.  
 주 : 1) 주택가격(계절조정자료).  
 2) 모기지금리 및 주택구입여력지수 (비계절조정자료).

5)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과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자료: FRB).  
 6)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s of Realtors)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여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중위주택가격, 중위가구소득, 평균모기지금리를 반영하는 지수로 100p를 기준으로 높을수록 가구의 주택 구매 여력은 높은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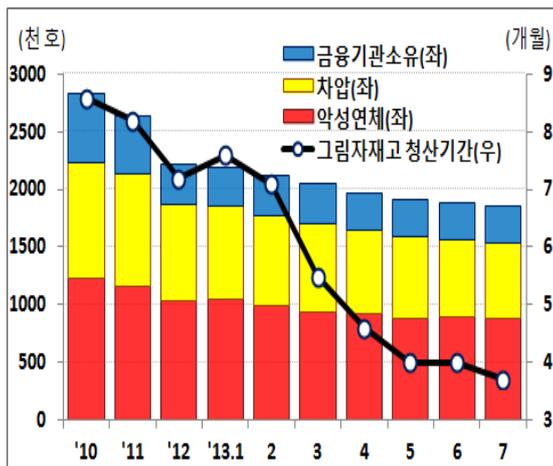
- 최근 주택 청산 기간이 줄어들고 주택 판매량은 증가하며 기존주택 재고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 물량 해소는 순조로움
  - 기존주택 청산기간은 2010년 중반의 12개월에서 대폭 줄어들어 2013년 4월 이후 4.9~5.2개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9월 현재 5.0개월을 기록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판매량 모두 2010년 중반 이후 증가하여 2013년 9월 현재 각각 539만 호와 42만 1천호를 기록
  - 기존주택 재고량은 2013년 9월 현재 221만 호를 기록하여 주택경기가 위축되기 이전인 2004년 12월의 224만 호 수준까지 감소
- 부동산 가격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그림자 재고(는 감소하여 안정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그림자재고는 부동산 버블의 정점인 2006년 중반의 38만 호보다 약 4.9배 정도의 여전히 많은 수준
  - 그러나 재고 규모 및 청산기간은 감소하여 2013년 7월 현재 각각 185만 4천 호와 3.7개월을 기록 중이며 특히, 재고 규모는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
  - 이 중 90일 이상 연체된 악성연체주택은 2013년 들어 100만 호 미만에서 안정적인 수준까지 감소(2013년 7월, 87만 4천 호)하였으며 이는 2008년 11월 이후 최저치

< 주택 판매량, 재고량, 재고청산기간 추이 >



자료 : NAR.  
 주 : 1) 판매량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총합.  
 2) 재고량 및 재고청산기간은 기존주택.

< 그림자재고 해소 추이 >



자료 : Core Logic.  
 주 : 2010 ~ 2012년은 월평균 자료.

7) 그림자재고(shadow inventory)는 시장에 나와 있지 않는 금융기관 소유주택(REO: Real Estate Owned), 차압절차에 들어간 주택, 90일 이상 모기지가 연체된 악성연체주택(Seriously Delinquent Mortgage) 등을 의미함(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의 배경', 「경제주평」 통권 제488호, 2012년 5월).

② 투자 : 기업 재무 여건 개선으로 향후 투자 증가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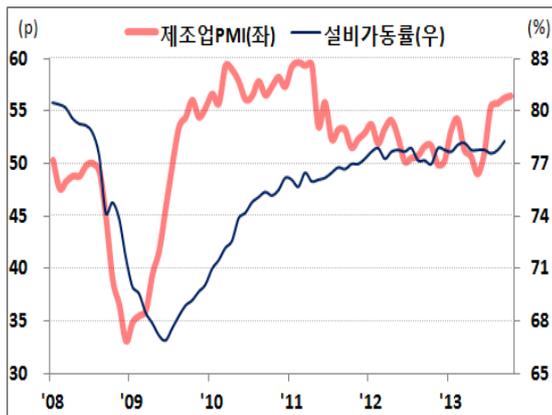
- (투자 증가 및 산업생산 증가 기대)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며 생산 여력 개선으로 향후 산업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 개선 전망
  -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상승 추세
    - 금융위기를 거치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총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2011년 2/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하여 2013년 2/4분기에는 6.5%를 기록
    - 주거 부문 투자 증가율은 2010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2012년 3/4분기 이후부터는 10% 중반을 유지하며 2013년 2/4분기 현재 14.2%를 기록
    - 경기 변동 및 잠재성장력에 영향력이 큰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2013년 2/4분기, 3.3%), 이는 향후 경기 전망이 개선으로 돌아서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sup>8)</sup>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및 생산 여력 개선 등의 요인으로 향후 산업 생산은 증가하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창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제조업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2013년 6월 경기 전망에 대한 중립선인 50p<sup>9)</sup>를 넘은 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10월 현재 56.4p를 기록
    - 향후의 생산량 증가 요구에 대비하여 산업부문의 능력과 유연성을 반영하는 설비가동률 역시 상승하며 2013년 9월 현재 78.3%를 기록

< 부문별 투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미국 상무부.  
주 : 전분기대비 연율.

< 제조업PMI 및 설비가동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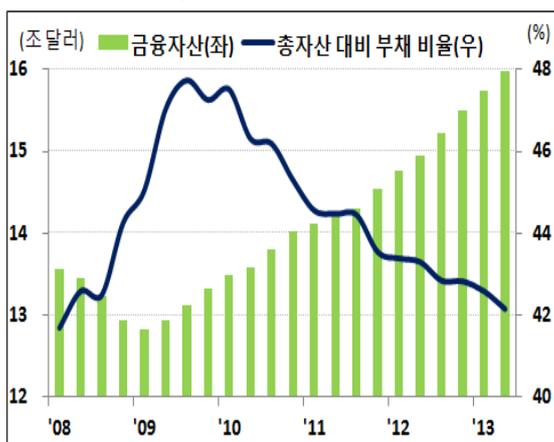
자료 : 공급자관리협회(ISM), FRB.  
주 : 계절조정자료.

8) 2012년 기준, 민간투자 중 기여도의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설비투자(30.1%)이며, 그 다음이 주택투자(23.5%)임.  
9) 공급자관리협회(ISM)의 구매관리지수(PMI :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50p를 기준으로 50p를 넘으면 현재와 미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함을 나타내며, 50p이하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임을 나타냄.

○ (기업 재무여건 및 실적 개선 전망) 기업의 재무여건이 개선되어 향후 투자 증가와 실적 개선세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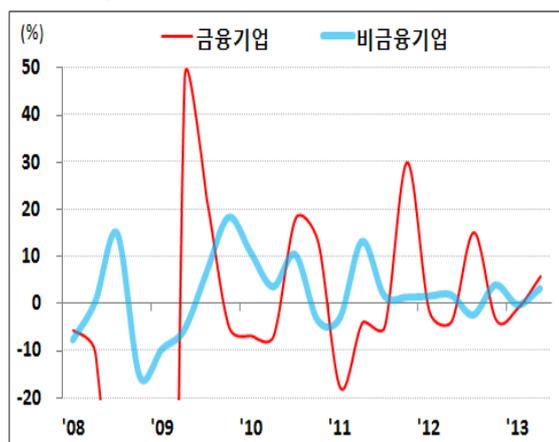
- 기업들의 부채 감축을 위한 디레버리징 노력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등 향후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비금융권 기업의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하락하여 2013년 2/4분기 42.2%를 기록. 이는 리먼 사태 직전인 2008년 1/4분기의 41.7%에 근접하는 수준
  - 비금융권 기업의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2009년 1/4분기 12조 8천억 달러까지 감소한 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3년 2/4분기 현재 16조 달러까지 대폭 증가
- 법인세율 및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세로 반전하는 추세가 나타남
  - 금융기업의 (전기대비)영업이익 증가율은 2013년 1/4분기의 -0.9%에서 2/4분기에는 5.7%로 상승. 동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4,317억 달러에서 4,562억 달러로 증가
  - 비금융기업의 (전기대비)영업이익 증가율은 2013년 1/4분기의 -0.3%에서 2/4분기에는 3.2%로 상승. 동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1조 1,903억 달러에서 1조 2,281억 달러로 증가

< 비금융기업의 재무 여건 추이 >



자료 : FRB.

< 기업 영업이익의 증가율 추이 >



자료 : 미국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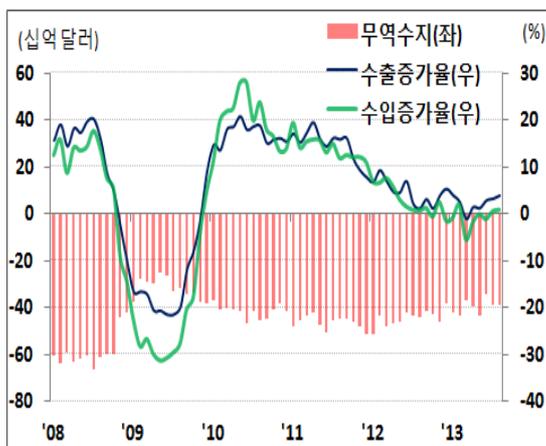
- 주 : 1) 계절조정자료.
- 2) 재고평가 및 자본재 감가상각 조정.
- 3) 금융위기시 비금융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536%(08년 4/4분기)를 기록하였음.

### ③ 대외 교역 : 수출의 투자 및 고용 견인력 약화

○ (수출 증가세 미약) 현재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자유무역확대를 위한 수출 확대 정책 시행

- 금융위기를 겪으며 증가한 미국의 수출은 하락세를 보여 제조업 등 재화 생산 부문의 투자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못함
  - 금융위기를 겪으며 상승한 미국의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 하락하여 2013년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9%를 기록
  - 무역수지는 2012년 이후 적자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3년 8월 현재 39억 달러 적자를 기록
- 현재 수출의 경기 회복 견인력은 약화되지만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
  - 오바마 행정부 1기의 '국가수출주도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2010)'을 계승하여 2014년까지 수출량을 두 배 이상 증가할 계획
  - 미국내 산업 보호와 세계 교역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
  -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re-shoring)을 추진하여 수입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

< 수출·수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미국 상무부.  
주 :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오바마2기 통상 부문 주요 추진 방향 >

항목	내용
FTA 확대	(국가수출주도전략 계승) - 2014년까지 수출량 2배 증가
	(정부 행정 업무 지원) - '중소기업일자리법안'
무역 질서 확립	(불공정 무역 관행 감시) - USTR 산하의 무역집행센터 - 무역단속단 신설

자료 : 미국 백악관(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 노믹스 2.0의 출범과 파급 영향', 2013년 1월에서 재인용).

④ 정부지출 : 긴축재정으로 경기 회복 견인력 약화

○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지출 감축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만, 정부지출 감소로 경제회복은 지연되고 양당의 대립이 재현될 우려 상존

- 재정긴축 시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연방정부예산 자동삭감(Sequester)으로 2013년 9월말까지 2012년 GDP의 0.5%인 850억 달러가 감축되었고, 2021년까지 총 1조 2천억 달러가 감축될 예정
- 재정적지는 2009년의 1조 4,127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GDP 대비 4.2%인 6,803억 달러까지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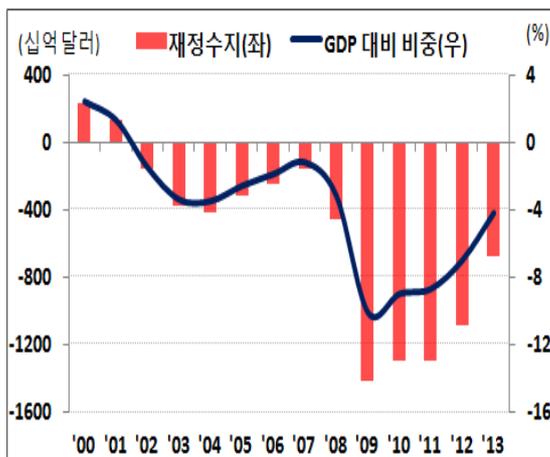
- 반면, 정부지출 감소로 인해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악화되고 경제 회복을 저해할 우려

- 재정절벽 논란이 불거진 2012년 4/4분기 이후 정부지출의 증가율은 (전기대비연율) -6.5%, -4.2%(2013년 1/4분기), -0.4%(2/4분기)로 감소세
- 동기간 동안 정부지출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1.31%p(2012년 4/4분기), -0.82%p(2013년 1/4분기), -0.07%p(2/4분기)로 경제 회복을 저해

-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부 역할에 대한 정치 철학적 입장 차이로 2014년 예산안 합의를 둘러싼 정치 리스크 재현 우려 상존

-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정부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세계 개편을 통한 증세로 균형재정 달성을 주장
-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은 증세에 반대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감축이 중심인 균형잡힌 지출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을 주장

< 재정수지 추이 >



자료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정책 비교 >

주요 내용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 세부담증가, 국방비 지출축소</li> <li>- 2022년까지 의료지출 3,600억 달러 감축</li> <li>- 최고소득자 평균 세율 인상(26→30%)</li> </ul>
공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지출 및 공무원 감축</li> <li>- 2022년까지 의료지출 1조 1,200억 달러 감축</li> <li>- 2015년까지 연방정부공무원 30% 감축</li> <li>- 정부재량지출 2008년 수준으로 감축</li> </ul>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주요 내외신 종합).

### 3. 종합판단 및 시사점

- (종합판단) 2014년에는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 증대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미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상당부분 통과하고 있으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르는 주택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시장 개선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미국 경제는 소비의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되지만, 투자와 수출 부문의 고용 창출력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소비 부문 : 주택경기과 가계 재무여건의 개선으로 소비 부문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이 미흡한 점은 지속적인 소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투자 부문 : 기업의 재무 여건 및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고용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영향은 미미함
    - 대외교역 부문 :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재화 부문의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해 경제 성장 견인을 기대하기 힘들
    - 정부지출 부문 : 미국 정부예산 자동삭감 등으로 재정의 경기 견인력이 약화되며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력은 미약함
  - 향후 미국 경제의 경기 회복 속도는 고용시장의 질적인 개선이 수반되는 '고용 선순환 고리' 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고용 선순환 고리 : “부동산 시장 회복 및 가계 재무여건 개선 - 주택 수요 증가 - 건설부문 투자 및 고용 증가 - 소득 증가 및 소비 수요 증가 - 설비 투자 증가 - 제조업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를 의미

- (시사점) 미국 경기 회복세 변동에 따르는 위험 요인 최소화와 기회 요인 극대화를 추구하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르는 자금 흐름 불안정성에 대비
  - 하반기 미국 경기 회복세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미국 경기의 둔화는 수입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며 미국 달러화 약세 추세와 함께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이는 최근 원화 강세로 타격이 예상되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악화될 우려
    - 수출 기업의 경쟁력 보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디자인 개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
  - 미국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미 수출 증대 기회 요인과 미국의 해외자본 유치 정책을 활용하고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
    -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미국 시장 개척과 대미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함
    -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은 미국 현지에 진출거점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
    - 점증하는 대미 통상 마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
  -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응하여 국내 투자의 선제적 확대 유도
    - 그동안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으로 투자를 유보해왔던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해외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활성화도 달성
    - 미국의 경기 회복은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를 수반하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품인 중간재 부문 등에서 투자 확대

-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출구전략 시행에 따르는 파급 영향의 대비책 마련
  - 해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 강화
  - 환율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환율 방어 정책 시행
  - 해외 자금의 급유출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여건 급변에 대응하는 경제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내수 침체를 완화**HRI**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별첨]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 리스크

○ 올해말과 내년초, 2014년 예산안과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 리스크 재현 우려

- 2013년 10월의 연방정부 폐쇄 해제와 디폴트 위기 탈출은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미룬 한시적인 미봉책인 정치권의 타협
  - 2014년 1월 15일까지 9,860억 달러 수준의 연방정부 잠정예산안이 통과
  - 2013년 10월 1일 폐쇄되었던 연방정부는 17일 오전을 기해 정상 업무를 시작
  - 채무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긴급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2014년 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돈을 끌어 쓸 수 있게 함
  - 2013년 9월말 현재 정부 채무는 16억 6,993억 9,600만 달러로서, 채무 한도인 16조 6,994억 2,100만 달러까지 2,500만 달러 여유밖에 없는 상황이었음<sup>10)</sup>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를 고수하는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지만, 재정절벽 타협시 부유층 증세를 허용한 공화당은 확대되는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대립이 지속됨

< 재정 정책 협상 관련 주요 일정 >

일자	내용
2013.1.2	· 재정절벽 스몰딜 타결
3.1	· 시퀘스터 시행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5.18	· 채무상한선 적용 유예 (비상조치 시행)
10.1	· 연방정부 폐쇄
10.16	· 연방정부 폐쇄 해제 (2014잠정예산 적용) · 채무상한선 적용 유예
12.13	· 장기 재정적자 감축 합의
2014.1.15	· 2014 잠정예산 만료
2.7	· 채무상한선 적용 유예 만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주요 내외신 종합).

<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 내용 >

대상	주요 내용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li> <li>-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 부과</li> <li>- 과거 병력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li> <li>-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보험료 차등 지급</li> <li>- 저소득층 대상의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 의무화</li> <li>- 정규직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li> <li>- 정규직이 25명 이하인 사업장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공제 혜택 제공</li> </ul>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주요 내외신 종합).

10) 자료 : 미국 재무부,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United States」, 2013년 9월.